질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급심에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정보공개 청구시가 아니라 문서 공개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례를 예로 들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입수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된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례가 있습니다.

질문

택지 개발 관련 ○○시 관련 부서 의견, 전문가 의견, 주민의 견서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의견서”의 내용에 개별 의견 제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제출 의견을 공개할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 간의 분쟁과 시시비비에 휘말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 조항 ‘다목’의 규정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인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구제(사익)을 비교·형량(교량) 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 참고로 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처럼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이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지급명령서, 조정명령서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권 확보에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할 것이나 입증 책임은 청구인 자신에게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 야영장 공개 모집과 관련하여 ‘심사위원들의 심사 배점표 및 평가 기준표’에 대해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 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어 그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 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만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 심사배점표, 평가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는 특정 위원이 특정 기관에 특정 항목에 대하여 몇 점을 부여했는지를 정보를 취득한 청구인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적고, “심사배점표 및 평가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오히려 청구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질문

민원인이 민간위탁사업시설(구립 보육시설)에 대한 감사 실적, 이유 결과 및 조치 사항을 요청하였는데 공개가 가능한 것이지요?

답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나열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 개발, 인사 관리”업무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업무의 예시로서 이들 영역에서 비공개로 되는 것은 ‘행정 운영 정보’ 중에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 아울러 “의사형성 과정 정보”와 관련 행정기관으로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 전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전과 달리 의사결정 후에도 장래의 동종 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서도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 다만, 정보 공개로 행정기관의 적절한 의사 결정에 지장을 미칠 염려의 유무 및 그 정도를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당해 공공기관의 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참고로 “공개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가 문제시되는 바, 종례의 판례(대판 2003.8.22, 2001두 12946)는 의사형성 과정의 정보로서 비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교직원의 징계 관련 자료(성명, 직장명, 사유, 처분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 판·검사(판사와 검사는 ‘법관 징계법’ 및 ‘검사 징계법’ 제23조에 의거 징계 처분 내역을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를 제외한 그 밖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징계 처분 내역은 당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 가능합니다.
- ▶ 교육청 공무원의 징계 처분 내역은 비록 그것이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및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 ▶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조항 ‘다목’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에 대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등과 비공개로 인하여 얻어지는 개별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호 이익의 비교 형량이 필요합니다.

※ 행정소송 판결례(사건번호 06-272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질문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과 시장과의 대화 및 회의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녹음 내용에 대한 청구가 들어온 경우 공개해야 하는지요?

답변

- ▶ “주민과 시장과의 대화·회의내용(녹음)”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당해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 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은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발언 내용만으로도 발언자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 청취·토론 과정이 공개되어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발언자 부분을 가린 부분공개를 할지, 전체 공개를 할지, 전체 비공개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

특정 직원의 임용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했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신청되었는데, 공개 가능한지요?

답변

▶ 당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5호 “인사관리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5호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제5호의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판례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 정보→정보공개→사전정보 공개→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질문

시험 응시 수험생이 본인의 OMR 답안지, 본인의 출제 시험지, 출제 정답을 정보 공개신청을 했는데 사본 출력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답변

- ▶ 지방직 시험의 출제 방식이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이라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규정의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 이와 반대로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이 아닌 '직접 출제 방식'의 시험지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 참고로 판례는(서울행정법원 2005.12.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 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므로 이 시험의 기출 문제지가 공개 된다고 하여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 하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건축신고 일체 서류와 절차에 따른 협의 서류 등을 공개 청구 했는데, 건축주의 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와 관련, 해당 인허가 신청서에는 해당 민원인의 개인 식별형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의 공개시 당해 민원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7호와 관련, 건축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건축설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구조도, 설비도 등)이 ① 설계·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인지 여부, ② 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 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차후 준공 후 당해 건축 시설 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허가 신청 민원인은 정보공개법상의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의견 제출서를 받았습니다. 제출된 의견 제출서에 대해 정보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과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 부지 선정 및 매입, 입찰과 계약 절차를 통한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견서를 공개할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의견이 노출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시시비비가 일어날 소지도 있으며, 결국 사업 착공 후에 집단 행동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우려가 없다면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개 시에도 제6호와 관련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린 형태의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

청원경찰 채용 공고 등 채용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가 가능한 것이지요?

답변

- ▶ “청원경찰 채용 공고 등 채용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채용 관련 자료의 경우 채용 종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실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 이므로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개연성을 가지고 입증해야 합니다.
- ▶ 다만, 채용 공고는 ‘공고’라는 단어를 보건데, 이미 알려진 정보인지 여부,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가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해 오히려 공개 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 보통 인사 관련 정보로 비공개되는 정보의 유형으로는 ①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② 직원의 근무 성적평가에 한 정보,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이 있습니다.

질문

장애인 연합회에서 OO군에 장애인 개인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명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개할 수 없는지요?

답변

- ▶ 장애인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장애인복지 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시·군·구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 지방공무원이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 장애인의 장애 내역 등의 정보가 누설되어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업무상 비밀 누설을 금지한 입법 취지로 판단되며,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함)』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3항의 당해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 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각호의 규정에도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 수행 기관의 장애인 명단 제공 요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장애인 명단의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과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장애인 복지법의 입법 취지, 그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파급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 '가목'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법령을 말하는 것이지요?

답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 '가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 개별법에서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예시하여 보면, 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으로서 서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 제외)의 정보를 피 청구인(소환 대상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②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및 사본 교부로서 신청자 모두에게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③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자 등록부'의 열람으로서 청구인에게 대부업자 성명,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부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④ 『지적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 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의 교부로서 청구자에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전산 정보 처리 조작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등의 정보는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각 개별 법령에 열람이 허용되는 정보라면 예외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 참고로 판례(대법원 1997.5.23, 선고 96누2438판결)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라도 언제나 비공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만이 비공개 대상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질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거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도 근무 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 공무원의 정보 중 개인에 관한 비공개의 구체적인 대표 사례로 ① 근무 성적·학력·소득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과 같이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② 인사 교류 신청, 채용 후보자 명부, 교육 훈련 관리, 징계 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③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자의 재산 신고 등 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인적 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행사 참석자 정보, 비위 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질문

OO시 유류 유출 피해 관련 생계 지원비 수급권자 명단(주민등록번호 등 제외)을 생계 지원비 미수급자가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공개 가능한지요?

답변

- ▶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 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어 그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 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만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하여야 합니다.
-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세부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입니다.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자(死者)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한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 관계, 재산 내역,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 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민사 소송 제기를 위해 해당 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보는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며, 다만,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공개 동의나 단서 조항 각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 단서 조항 각목 중 ‘다목’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단서 조항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 구제(사익)을 비교·형량(교량) 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민사 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 ▶ 다만,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 조항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타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 일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 “타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 일자”의 정보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예외적인 공개 사항인 단서 조항 다목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타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 일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며 다만,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동의나 단서 조항 각 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 예외적인 공개 사항 중 ‘다목’의 의미는 신체 장애인 상담원 명부처럼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이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자동차 등록 원부의 발급 및 열람은 자동차 등록 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 발급·열람이 가능한데,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답변

- ▶ 『자동차 등록 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 자동차 등록 원부의 등본(초본) 교부·열람 신청서를 등록 관청에 제출하는 자에 한해 발급 또는 열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량의 소유자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차량 등록번호를 기재 후 제3자도 등본(초본)의 교부·열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관련 규칙에 의한 등본(초본) 교부·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

지방의원이 의회를 통하여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통·반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유권 해석 사례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사·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임.
- ▶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갑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을에게, 갑이 관청으로부터 토지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보상일자, 보상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지요?

답변

- ▶ 우선 “특정인이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 보상일자, 보상금액”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이를 공공기관이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공개 동의나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 조항 ‘다목’인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 단서 조항 ‘다목’인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구제(사익)을 비교·형량(교량) 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 조항인 ‘다목’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입증 방법으로는 채권자인 청구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서, 지급명령서,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문 등 입증서류를 청구서와 같이 제출하였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이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채무자의 개인정보 중 재산(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유체재산, 채권 등)상황에 관련된 정보는 청구인의 정보의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입증이 이루어졌다면 법 제1조, 제3조, 제9조제1항 각호, 제14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개인정보 중 채권 확보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가 가능합니다.

질문

인허가 서류(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관련 서류 : 법인번호, 사업자등록증, 주소, 폐기물 종류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비교·형량에 참고해야 합니다.
-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소재지, 업종”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7호의 ‘개인·단체·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노하우, 고유 기술, 내부 업무 처리 등이 공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질문

임대인이 발급받은 등초본 인감 등의 민원서류 발급 내역에 대해 임차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경우 공개해야 하는지요?

답변

- ▶ 청구자(임차인)가 공개 청구한 “임대인의 민원 서류 발급 내역”의 정보가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 대상인 제6호 각 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이익형량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 ▶ 또한 당해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신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출장비 지급 현황과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경우 공개가 가능한 것이지요?

답변

- ▶ “시간외 수당, 출장비 지급 현황”의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 대상인 제6호 각 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6호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의 예외적 공개사항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문서를 직접 생산한 공무원이라든지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의미하는 점, 시간외 수당 및 출장비 현황은 개별 공무원의 소득 정보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시간외 수당 및 출장비 부당사용에 대한 공익적 감시 활동이라는 공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 ▶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부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인정되면 당해 부분만을 가린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질문

교장·교감의 이름, 소속, 성별, 나이, 직위, 현직위 임용일, 전공 과목 등에 대한 공개 청구시 공개가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 당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제6호에서 정한 예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한은 이외에도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인적 유대 관계, 초상 등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의 예외 사유로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가 제6호 각 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호의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판례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정보→정보공개→사전정보 공개→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따라서 “교장·교감의 이름, 소속, 성별, 나이, 직위, 현직위 임용일, 전공 과목”의 정보는 공무원 개인정보로서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장 인사와 교직원 현황에 성명, 직위, 사진 등이 이미 공개된 학교가 대부분인 점, 전공 과목은 개인의 학력 정보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 ▶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부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인정되면 당해 부분만을 가린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질문

퇴직 공무원의 인사기록 사항에 대한 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공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 “퇴직 공무원의 인사기록 사항”의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 대상인 제6호 각 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6호의 예외적 공개 사항 중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에 퇴직 공무원도 포함되거나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관계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 ▶ 또한 당해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신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신청되었는데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 ▶ 위원회 명단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비공개 사유 중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먼저 제6호에 대한 검토를 하면 위원회 위원의 명단이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제6호 예외 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 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 최근의 위원 명단에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 사례를 들어보면,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명단의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 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심의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의회 참석 위원의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

A씨가 자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문 및 납부 영수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답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이 공개청구를 행할 경우 공개 여부는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법제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공개 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도는 정부 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 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된 전산 정보 및 이에 출력된 종이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 요청한 “공문 및 납부 영수증”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즉 컴퓨터에 의해 입력·저장·편집·검색된 정보를 출력한 종이 문서인지 검토 하신 후 이에 해당되면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 없이 민원인의 서면 또는 구두의 신청에 의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사본을 교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 ▶ 그러나 해당 정보가 종이 문서로 생산된 정보라면 이는 본인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어 정보공개 청구로 처리해야 됩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자치구)장의 1년 연봉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시 공개해야 하는지요?

답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제5호의 비공개 기준에 따라 행정 운영 정보와 관련, 행정기관이 행하는 업무 중 공개하는 것에 의하여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인사에 관한 문서 중에서 승진, 급여 등과 같이 공개되는 경우 인사 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제6호와 관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 중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됩니다.
- ▶ 단체장의 연도별 연봉액에 대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인사 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지와 제6호와 관련하여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을지 등을 검토하여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질문

피의자의 아버지가 지구대 CCTV와 사건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CCTV 내용을 복사하여 공개해야 되는지요?

답변

- ▶ 정보공개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필름·테이프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CCTV 내용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 ▶ 경찰청 내부 지침은 '지역관서 CCTV 운영 지침'에 수사 자료의 제출 이외에는 CCTV의 열람 등 자료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 규칙으로서 대국민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 지구대 CCTV 녹화 화면 속에는 청구자의 아들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를 공개 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 ▶ 또한 해당 사건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므로 사건 관련 증거 자료로 법원에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증거 자료의 축락을 통해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질문

세입자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청구자가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확정일자부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데, 제3자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 ▶ 청구자(채권자)가 세입자(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법원의 가집행 판결문을 증빙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압류하기 위해 전세 계약서에 의한 주민등록 확정일자부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세입자(제3자)의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나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입니다.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다목'인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개인 정보 중에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 예로 확정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을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 이후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가압류 및 가등기의 권리가 설정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구자로부터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압류를 허가하는 법원의 가집행 판결문을 청구서와 같이 접수받았다면 이는 청구자 즉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공개가 가능합니다.
- ▶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와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자의 청구 내용에 포함된 이해 관계자인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 명단에 있는 개인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 ▶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 명단(회원 개인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개인 식별형’ 정보인 이름과 ‘프라이버시 침해형’ 정보인 주소 및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회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와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제3자’의 처분 절차는 그 청구 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명백할 경우에는 이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 만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반드시 청구자의 청구 내용에 포함된 이해 관계자인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여기서 ‘제3자’의 의미는 정보공개 청구자와 이에 대한 공개 결정 여부의 결정 처분을 하여야 할 공공기관 이외의 이해 관계인(정보 생산기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제3자 의견청취 시 비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만약 제3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다면 제6호의 정보라도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

공무원의 학력 및 자격증 보유 현황(운전면허증 포함)이 개인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 가능한지요?

답변

- ▶ 당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공무원의 학력 및 자격증 보유 현황”의 정보는 공무원 개인정보로서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6호의 예외적 공개 대상에 직무 수행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이라고 한 점, 학력 및 자격증 현황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 ▶ 또한 당해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신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77

과태료 납부 내역 정보공개 청구

질문

기자가 정치인의 범칙금, 과태료 납부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할 수 있는지요?

답변

- ▶ 특정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경력, 명예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질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제외 대상 중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답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 조항인 ‘다목’의 의미는 신체 장애인 상담원 명부처럼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이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라도 언제나 비공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만이 비공개 대상이다.(대법원 1997.5.23, 선고 96누2438판결)”라는 판례 내용은 제6호의 단서 조항인 ‘가목 ~ 마목’의 입법취지와도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질문

OOO 선생님의 출장, 조퇴, 무단 결근 등 복무 상태(근무상황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가능한지요?

답변

-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과 관련,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도 그것이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예시로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 기관의 근무상황부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근무지내 출장, 육아 시간, 결근, 지참, 병 지참, 조퇴, 병 조퇴, 외출, 병 외출, 당직 휴무, 토요일 대체 휴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기타”의 사유로 구분하고 있다면 이중 비공개 판단의 기준이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이므로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 따라서 ‘근무상황부’를 전부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바, 업무와 관련된 출장 등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 ‘라목’에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근거 제시도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공적업무 수행과의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부분공개하기 바랍니다.

질 문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환원에 대한 정보공개가 신청되었는데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 변

- ▶ 먼저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장 개인 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 내역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정보공개법상 청구대상이 되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합니다.
- ▶ 만약,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개인 명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 내역이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명예, 재산 등에 해당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

비영리 법인 현황에는 허가 번호, 주소, 대표자, 법인번호 등 일종의 그 법인에 대한 신상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 비영리 법인에 대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영업 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가 정보공개법에서 참고는 되겠지만 이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 ▶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로 인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더 중대하다는 판단이 서야 됩니다. 따라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의 예를 들면 제7호의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호 및 소재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결례가 있습니다.
- ▶ 다만,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

예금의 평잔액, 평균 이율,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내용에 대한 청구에 대해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가능한지요?

답변

- ▶ 당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제7호는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하게 됩니다.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7호는 학교 법인, 종교 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도 포함됨을 고려할 때 “영업상 비밀”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비공개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는 한 비경제적 가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제7호의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관례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개 →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 따라서 “금고 약정서, 금리, 평잔 등”을 공개했을 경우 은행 등의 독립적인 내부사항, 노하우 등이 알려지게 되어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 ▶ 또한 당해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신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 문

사단법인 위원회가 취득한 점인 계약서에 대해 매매 일자와 매매 금액에 대한 정보공개가 청구되었는데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 “OO년 당시 (사)위원회가 취득한 계약서상 매매 일자와 매매 금액”의 정보는 ‘법인의 내부 정보’에 해당되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공개할 경우 당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 관계인으로 간주되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를 참고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정보 사용 목적)를 근거로 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보호 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 참고로 법원의 판례(서울고법 2002.8.27. 선고 2001누 17274호 판결 참조)를 참조하여 보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 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 제7호의 비공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①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② 최저 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 제원, 세부 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 하중의 산출 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 승인 신청서 등, ③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④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개인·단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수행능력 평가 결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질문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심의, 완공 내역(정산서 등)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 ▶ 당해 정보의 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 등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한 부분공개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참고적으로 보조금에 관한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과 같은 공적 자금에 의해 조성된 금원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 받는 보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조금 관계 문서는 공개할 필요성이 큰 정보에 해당합니다.
- ▶ 다만,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 순위 등의 실체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 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 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 공개 청구된 정보에 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시되, 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부분공개) 결정시 제3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 및 불복제기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바랍니다.

질문

업체 선정 및 계약까지 완료되어 곧 착수예정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의 CAD 도면에 대한 공개 청구시 공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 당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제7호는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하게 됩니다.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7호는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도 포함됨을 고려할 때 “영업상 비밀”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비공개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는 한 비경제적 가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제7호의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관례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개 →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의 CAD 도면”에 대한 공개 여부는 당해 설계·시공사의 독립적인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지 여부 등을 제7호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 ▶ 또한 당해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신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 문

업체의 상호, 주소에 대한 정보공개가 청구되었는데 공개가 가능한 것이지요?

답 변

- ▶ 업체의 상호명과 사업장 소재지는 법 제9조제1항제7호 규정인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로 인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더 중대하다는 판단이 서야 됩니다.
- ▶ 참고로, 제7호의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호 및 소재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결례(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516132)가 있습니다.

질문

사업자가 해당 분야의 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각급학교 배정 내역을 공개 청구했는데 어떤 근거로 비공개 가능한지요?

답변

- ▶ 당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제8호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 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유형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제8호의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판례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정보→정보공개→사전정보 공개→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 따라서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 내역”의 공개여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공개됨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특정한 이익을 주고 동종 업종의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개별법(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예산내역이 이미 공표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